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박종화



루드비히 반 베토벤(1770~1827)은 그 유명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쓴 1802년에 하나의 악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03년에 서양 음악사의 전환기를 장식할 곡을 창조한다. 이 곡의 원고 첫장에는 겸손하게 필기된 작곡가의 이름 위에 '보나파르트 헌정'이라고 굵은 글씨로 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작곡품이 초연될 3개월 전인 1804년 5월, 프랑스 혁명의 집정관이었던 나폴레옹이 자기 자신을 황제로 공포하고 나서자, 여기에 배신감을 느낀 베토벤은 원고 위의 보나파르트의 이름을 종이에서 떼어지도록 묶어 지워버리고 한다.

결국 이 곡은 1806년 '영웅 교향곡(Eroica Symphony)', 위대한 인간의 기억을 기념하며'라는 곡명으로 출판됐다. 에로이카(Eroica)는 이탈리아로 '영웅적'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다.

영웅의 의미를 사전에서는 '위험과 불우에 처한 또한 약자의 입장에서 전 인류의 안녕을 위해 용기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일을 하는 자'라고 되어있다. 이 뜻은 원래 군사적인 용감한 행위와 관련돼 사용됐으나 근대에는 도덕적 고결함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하나 사실 어느 인물이 사회에서 영웅적 지위를 수상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면모 뿐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 있는 시대정신까지 갖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영웅이 완벽해질 기대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혁명을 이룩해 영웅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프랑스혁명은 그

하나 사실 어느 인물이 사회에서 영웅적 지위를 수상화되기 위해서는 위의 면모 뿐 아니라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 있는 시대정신까지 갖춰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영웅이 완벽해질 기대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혁명을 이룩해 영웅이 된 것은 결코 아니다. 프랑스혁명은 그

파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국민의 공공이익을 존중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 질서 있는 정부를 창립했다.

그 후 나폴레옹이 전쟁이 벌어질 동안 프랑스를 방어하며 군주국들의 연합군 공격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프랑스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패배한 나라들의 영토를 점령하면서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전파하는 일에 충실했다.

프랑스혁명의 사상이 그 시대를 표현하는 시대정신이라고 본 나폴레옹은 그 시대정신의 행정가이자 보호자이자 전파자였다. 시대는 나폴레옹의 능력을 필요로 했고 그는 기꺼이 이 도전에 응했을 뿐만

예술적 가능성을 도전하는 매체로 진화했다고 말했다고, 또한 청중의 책임도 이에 따라 순수한 즐거움에서 공부를 통한 깨달음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베토벤은 이 행위를 통해 관습에 거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술적 숙명을 추구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심리적인 사실이 또 있다. 청각의 약화로 고통을 겪었던 그는 1802년 완치의 꿈을 버려야 한다는 현실에 처하고 절망에 빠진다. 그때 작성된 하일리겐슈타트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

"사람들에게 '귀가 잘 안 들리니 좀 더 크게 말해 주세요' 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해야 될 감각이 약하다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작곡가로서의 필수인 능력을 잃어가는 서도 사망감을 잃지않고 인류를 위한 위대한 작곡품을 남긴 베토벤 또한 시대의 영웅이 아니었는가?

1821년,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음을 맞이한 나폴레옹의 소식을 접한 베토벤은 말했다.

"나는 이 슬픈 날을 위한 음악을 17년 전에 작곡해 놓았다네"

이것이 바로 영웅 교향곡 2악장, 장송행진곡이다.

〈서울대 음대 교수·피아니스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영웅의 길

아니라 이를 능가하며 시대의 영웅이 된 것이다.

한편 베토벤은 비슷한 시기에 영웅 교향곡으로 음악세계에 혁신의 획을 긋는다. 영웅 교향곡은 그 전에 작곡된 어느 교향곡보다 길고 복잡했다. 1악장이 하이드나이나 모차르트의 어느 교향곡 전체보다 길었으니 청중이 경악한 것은 이해가 간다. 초연 후 반응은 명확히 나뉘었다.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감상하기 어렵다는 시각과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시각이다.

두번째의 시각을 지지한 자들은 음악이 청중 중심의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곡가의

## 시설

### 급식예산 한푼 못받은 시교육청 안일행정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교급식 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특별교부금을 한푼도 지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해자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모두 1200억 원에 이른다. 각 교육청별로는 서울이 13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93억 원, 경기 79억 원, 전남 52억 원 등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지원에서 열외가 됐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지만, 시 교육청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 신청을 받은 뒤 별도로 신청금액의 30%를 더해 지원을 해줬다. 만약 1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면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더해 13억 원을 지원 받게 되는 셈이다.

시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 탓에 가뜰이나 어려운 학교급식 개선사업비를 의면해 버린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더 받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교육청 내부에서 지탄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급식시설·중증이 많아 올해 상반기 예산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각종 학교에 노후 급식시설이 많은데도, 관련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시 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고교배정방식 축소시행, 사학과의 갈등, 교원단체 파문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력이 정도로 주먹구구식이라면 광주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지금까지의 행정행위를 돌아보고 적극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기아차 노사 '해약사태' 두고만 볼 건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 1t트럭의 해약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해약률이 29.3%로, 10대 중 3대꼴에 이른다. 고객들이 출고를 기다리다 못해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에 따르면 봉고 1t트럭의 지난 달 해약이 2040대에 달했으며 지난 4월 21.1%, 5월 25.9%, 지난달 29.3% 등 해약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봉고 주문이 밀려드는데 반해 생산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물량은 내수 9000여대, 수출 1만2000대 등 총 2만1000여대로, 지금 당장 계약을 해도 차량 인수까지는 대략 두 달 반이 걸린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봉고 트럭의 적체가 심해지자 올해 초 시간 당 21대를 생산하던 기존 라인 운영을 2대 더 늘려 23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노사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특근 운영에 대한 입장차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아차는 지난 13일 급속노조 파업에 동참해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날 파업으로 광주공장은 800여 대 생산 중단과 130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노조는 오는 20일에도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산 지연과 파업으로 인한 해약사태는 기아차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물론 국내 판매망과 해외 수출선이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일 최고의 판매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기아차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고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사는 대화를 통해 봉고 트럭 증산과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노사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나라사랑 칼럼



서강석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미래를 비추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일은 과거를 앞으로써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고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5000년 역사 속에 900회가 넘는 외침에 시달려야 했던 아픈 민족사를 가진 우리에게, 역사를 배우고 교훈 삼아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도모하는 길이야말로 시대적 사명이자 나라사랑의 기본일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지난 6월, 국내 한 연구소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인식 수준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왕

## 역사교육은 미래의 성장동력

조사의 변천 과정조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역사인지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구별하지 못하고 김유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 중 누가 앞 시대의 인물인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부지기 수였다. 심지어 고조선-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남북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왕조사(王朝史)의 흐름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넘쳐났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사 교육에 대한 홀대가 빚은 결과이다.

21세기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한층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지만, 한반도는 100년 전 구한말 때처럼 또다시 외세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주의와 G20 급성장한 중국의 중화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경화로 치닫

있는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고 구소련 붕괴 이후 숨을 고르던 러시아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100여 년 전 구한말의 우리 역사가 왜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밝은 역사를 꾸려나가기 위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적 교훈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할 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사교육을 너무도 소홀히 해왔다. 초등학교에서는 역사관련 과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선택과목으로 취급하다 최근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떠밀려 겨우 필수과목이 됐다. 하지만 대입 수험능력시험에서는 여전히 선택과목으로 배정돼 '내신형 과목'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이 TV 역사드라마나 영화 속의 픽션(fiction)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오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교육은 국가발전의 잠재적 성장동력이다. 호남대학교는 이 같은 역사인식에서 지난 2004년부터 '일본 교과서 왜곡발본전'과 '우리 땅, 독도수호 특별전'을 열어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해 왔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순회전을 개최하고, 광주지역 중·고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순회전시를 열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호남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는 학술연구를 통해 19세기 후반 울릉도 독도의 개척민이 전남 순천, 고흥 여수사람들임을 밝혀냈다. 독도라는 섬 이름 역시 전라도 방언 '독섬'에서 유래된 명칭임을 규명해 냈다. 21세기 들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장소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글귀가 걸려있다. 명심하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아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내는 '나라사랑'의 첫 걸음임은. (호남대학교 총장)

광주일보는 광주지방보훈청과 공동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 사회정당인과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나라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연계하는 코너를 운영합니다.

## 의료 칼럼



김원영

개원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개원 초기 증풍(뇌졸중) 예방 주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런 주사가 있어요?"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저가 달린 바늘을 혈관에 꽂고 있으면 피가 맑아져서 증풍이 예방되는 것처럼 혈관 침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이저 혈관침은 효과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나의 갖은 설명에도 환자들의 증풍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레이저 혈관 침의 위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곳에선 서비스로 해줄

## 치매 예방 주사

정도로 시들해져 갔다. 그 때쯤 고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손에 붕대를 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 어디서 다쳐셨고 물어보면 증풍에 안 걸린다고 해 옹한 사람이 있다는 시골까지 가 손바닥을 갈로 찔었다는 것이다. 혼자서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갔다 왔다는 분들도 많았다. 할 말을 잃었다. 몇 달 후 신문 사회면에 그 시술을 한 사람이 구속됐다는 기사가 실린 후 그 여행도 끝이 났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치매 예방 주사를 놓느냐는 것이다. 아들이 산부인과 의사인 한 어르신은 왜 주사를 놓지 않느냐고 물으셔서 '효과 없습니다. 아드님께 물어보시죠'라고 답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사를 맞으셨다. 200cc 정도 되는 혈관 주사를 10번 맞았다는 것이다.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여쭙더니 '난 아들에게 안 물어봐,

진짜 효과 없어? 밀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맞았어'라고 하신다. 적지 않는 돈인데 치매라는 공포는 이성도 마비시킨다. 또 큰 부작용이 없다면 객관적 치료효과 검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치매(dementia)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유지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지적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긴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약 50~6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하며, 나머지 10~30%는 기타 원인에 의한. 혈관성 치매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생기거나 이러한 병으로 인해 중

풍을 반복해서 앓게 되면 생긴다.

이 때문에 증풍의 위험인자를 지닌 사람이나 이미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 모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과 같은 위험 질환을 막물고 등으로 관리하면서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한다. 주사 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단백질이 뇌에 쌓여 발생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1600만달러를 지원해 남미 콜롬비아의 안티오키아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유전자를 지닌 특수 가계에서 선발된 300명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을 예방이 가능한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정한 의미의 치매 예방 주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간 신문의 일면이나 텔레비전의 저녁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우리들 내과 원장〉

## 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못믿을 뷔페식당'

지난번에 미국에서 6년 만에 또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냥 미국산 소고기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를 막아버렸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전 모 뷔페식당에 갔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날은 아버지 칠순잔치였고 그 옆에선 아가들 잔치를 받이는 중이었는데 음식을 가져온 한 남녀 젊은이가 음식 메뉴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남자가 소고기 갈비점을 집어들자 여자가 기어코 소고기 대신 다른 음식을 담자며 짜증을 냈다. 옆에서 지켜보니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그 광우병 여파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고기 기피

현상이 생긴듯했는데 이 뷔페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해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마저 소고기라면 원산지나 요리 종류를 불분하고 꺼리는 것이었다.

일전에 조류독감 파동이 났을 때 젊은 사람들이 떠벌리 먹을 때도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얹어줘도 조류독감이 무섭다는 이유로 그것을 빼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뷔페 집에 몰렸더니 소고기 요리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알려줬다.

도시 사람들은 그만큼 먹는 것에 민감하다.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식품

위생관념이 철저한 상황에 뷔페 식당에서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한 건 너무나 큰 잘못이다. 광우병 파동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먹는 모든 나라가 비상인만큼 고기종류의 원산지 표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굳이 법적인 규정을 떠나 사회 구성원 간의 중요한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대형 뷔페식당이나 예식장 식당 등 단체 급식을 하는 식당들의 경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면 좋겠다.

▲김순자·광주시 북구 각화동

## 無等鼓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은 분노하고 새누리당은 공황상태다. 민주당은 낯이 서 있지만 이 역시 비난 자격이 있나 없나에 대해 공허 할 뿐이다. 국회 의원 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해신책을 보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서 또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화가 날 뿐이다.

정치권은 사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했고, 민심의 준엄함을 잊어버렸으며 시대의 큰 흐름을 읽지 못했다. 국민이 이처럼 노도와 같은 분노를 표출 한 것은 우선 여당과 야당이 지난달 앞다투어 내놓은 정치 해신책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다. 또 정 의원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인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임에도 특권의 방패로 가해자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 발전 수준은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른 것 같다. 국민은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권력의 오만함을 더 이상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정치현실을 이유로 자신의 시대착오적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려 한다. 과거 웬만한 부정부패 행사에도 국민들이 체념하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던 때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불체포 특권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체포 특권이 논쟁이 되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부터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개꾸로 입법부의 특권 남용으로 결론 지어지는 현실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른바 '방탄국회'가 대표적 예다. 국회의원의 체포 저지를 위해 불이 가장 큰 피해자인 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임에도 특권의 방패로 가해자를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필요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동료의원 감싸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약속에 대한 준엄한 자기 반성과 함께 가시적인 보완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를 과약하지 못하는 한 자신의 설 자리는 없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 '혹시나'가 '역시나'



<p>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p> <p>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p> <p>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p> <p>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p> <p>(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p> <p>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p> <p>(대표 FAX 222-4267) 전사팀 2200-685</p>	<p>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p> <p>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